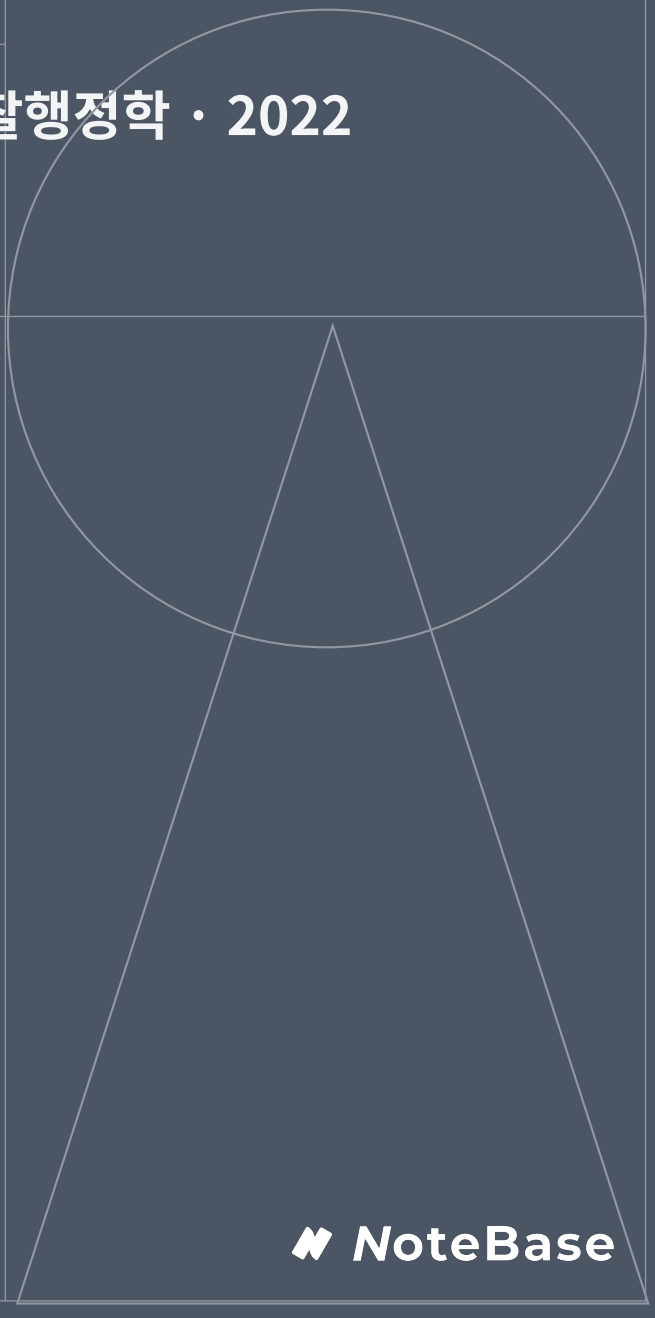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2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2

문 1.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성이 강조될 때, 효과성은 저하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제1조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기본가치는 공정성과 민주성이다.

③ 행정의 공평성은 '같은 사람을 같게' 취급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④ 행정의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답 2번

①

민주적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면 의견 수렴·조정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지연되어 **목표 달성 정도인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②

두 법률이 공통으로 명시하는 기본가치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다. 공정성을 명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규정이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조건의 사람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성은 **관련된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NoteBase

④

능률성은 **산출을 투입으로 나눈 비율**로,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을수록 높다.

문 2.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말한다.

② 퍼트남(R. D. Putnam)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③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여 등가물 교환이 이루어진다.

④ 사회적 규범을 공유하는 강한 결속력은 집단의 폐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적인 등가물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보답의 시기나 내용이 미리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관계와 신뢰, 공유된 규범을 통해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자원이다. 서로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와 연결망이 형성되면 공동의 목표를 위한 집단행동이 쉬워진다.

② O: 퍼트남은 **네트워크·신뢰·규범**을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네트워크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신뢰는 상대방이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며, 규범은 호혜적 행동을 뒷받침한다.

③ X: 사회자본에 기초한 교환은 신뢰와 호혜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동시에 같은 가치의 대가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에서는 당장 특정한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도움을 제공하며, 이후 상대방이나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따라서 도움과 보답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 보답의 내용과 크기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④ O: 같은 규범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강한 결속은 내부 협력을 높이지만, 내부자만 우대하고 외부자를 배제하는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자본이 집단 내부에 주는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적인 등가물 교환을 전제로 한다고 한 ③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3. 환경오염과 관련된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대가나 비용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 한다.

② 외부불경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생산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③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

④ 이해관계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코오즈 정리(Coase's Theorem)는 거래비용이 크게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코오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래비용이 크다는 것은 이러한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외부불경제는 경제활동이 거래 당사자 밖의 다른 주체에게 손해를 주지만, 그 손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시장 거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이다.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이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O: 오염을 유발하는 생산자는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사적 비용만 고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는 비용에서 빠뜨린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져**,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하게 된다.

③ O: 정부는 오염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여 오염 비용을 부담시키고, 오염 저감 시설이나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 감소를 유도하며, 배출허용기준 등 행정규제로 오염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조금은 **오염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④ X: 코오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없다는 조건**에서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 거래비용에는 협상 상대를 찾고 합의하며 합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 이 비용이 크면 협상의 이익이 줄거나 협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거래비용이 크게 존재할 것'은 정리의 전제가 아니다.

NoteBase

문 4.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W. A. Niskanen)은 미국 국방성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동을 연구하여 정부실패의 근거를 찾았다.

②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③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의 상황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④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X-비효율성이라고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시장이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는 **시장실패**이다. 정부실패는 정부의 개입이나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미국 국방성에서 근무한 니스카넨은 관료의 행태를 '예산극대화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이 모형에서 관료는 자신의 권한·지위 등과 연결되는 **소속 조직의 예산 확대**를 추구한다. 관료의 정보우위와 독점적 지위로 인해 예산과 공공서비스 공급이 사회적 적정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를 설명한다.

② O: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려고 개입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비효율을 낳는 경우,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③ X: '파레토 효율'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한 사람의 후생도 더 높일 수 없는 자원배분 상태이다. 시장의 자원배분이 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실패**이다. 정부실패는 정부의 개입이나 재화·서비스 공급이 자원배분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선지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혼동하였다.

④ O: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 경쟁 압력이 약해져 비용 절감과 성과 개선의 유인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 결과 동일한 산출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조직 내부의 관리상 비효율을 'X-비효율성'이라 한다. 이는 정부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경쟁이 제한된 민간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문 5.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무실에서의 업무에 시간과 능력을 전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없고 겸직 등을 할 수 있다.

② 베버(M. Weber)는 관료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의 근거를 법적 권위에서 찾고 있다.

③ 관료제의 직무조직은 계층제의 원칙을 따르며,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따른다.

④ 머튼(R. K. Merton)은 관료제의 역기능이 최고관리층의 통제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베버의 관료제는 관료가 직무를 본업으로 삼아 **업무능력을 직무 수행에 전적으로 투입하는 전임성**을 전제로 한다. 업무에 전념할 필요가 없고 겸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베버의 관료제에서 관료의 직무는 부업이 아니라 **전임직**이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직무 수행에 자신의 업무능력을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에 전념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전임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② O: 베버의 관료제는 **합법적·합리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다. 합법적으로 제정된 규칙과 그 규칙에 따라 부여된 직위의 명령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복종한다. 개인의 신성함이나 영웅적 자질, 오래된 전통이 관료제 권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O: 관료제의 직위는 상하 관계가 명확한 계층제로 조직되며, 상급 직위가 하급 직위를 감독한다. 직무 수행은 **문서에 기초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므로 업무 처리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를 확보할 수 있다.

④ O: 머튼의 관료제 역기능 모형은 최고관리층의 통제욕구에서 출발한다.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규칙 준수와 행동의 신뢰성을 강조하면, 구성원이 규칙을 지나치게 내면화하여 **수단인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표대치**가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행동이 경직되고 개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발생한다.

NoteBase

문 6.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 체제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창한다.

②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탈관료제를 추구한다.

③ 총체적 정부(whole of government) 혹은 통합적 정부형태(joined-up government)를 통한 정부의 전체적인 역량 및 조정의 향상을 주장한다.

④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탈관료제를 추구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기능의 분절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조정과 재통합**을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공공관리론의 분권화와 조직 분리가 정부 기능의 분절과 조정 부족을 낳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통해 중앙의 통제·조정 능력을 회복하고 정치·행정 체제의 통합성을 높이려 한다.

② X: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전통적 관료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탈관료제적 개혁은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개별 조직의 자율성과 경쟁을 확대하는 데 치우쳐 생긴 분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협력·조정과 정부 전체의 통합을 강조한다.

③ O: 총체적 정부와 통합적 정부는 부처별로 분리된 정책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접근이다. **부처·기관 사이의 수평적 조정과 정부 수준 사이의 수직적 조정**을 강화하여 정책 간 충돌을 줄이고 정부 전체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인다.

④ O: 탈신공공관리론의 협력은 정부 내부의 조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강조한다.

NoteBase

문 7. 공익(Public Interest)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규범적·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②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 간의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③ 실체설은 개개인의 이익은 공동체의 공동선에 종속되며,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④ 과정설은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독자적·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과정설은 공익이 이해관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므로 정부의 **중립적 조정·중재 역할**을 중시한다. 정부의 독자적·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은 **실체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실체설은 공익을 **개인의 사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가치**로 본다. 따라서 공익은 사익을 단순히 모은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규범적·도덕적 기준이다.

② O: 과정설은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정치과정에 주목한다. 공익의 내용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익 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③ O: 실체설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공동선에 종속되며, 개인도 **공익의 범위 안에서 사익을 누린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에서는 공익과 사익을 서로 대등하게 대립하는 가치로 보지 않으므로 양자 간 갈등이 없다고 설명한다.

④ X: 과정설에서 정부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립적 조정자·중재자**의 역할을 맡는다. 공익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실체설**이다.

NoteBase

문 8.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한시적 면제 또는 유예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② 규제등록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간 등을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2번

①

규제 샌드박스는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등록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 내용 · 근거 · 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2.19>

③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NoteBase

④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의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3.7.11>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NoteBase

문 9. 정책분석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황의존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모형 외부에서 작용하는 배경 변수나 환경적 요인들보다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 수치가 변화할 때 대안의 결과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② 악조건 가중분석(a fortiori analysis)은 예비분석이나 현재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정책대안에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나머지 대안들은 최선의 상태를 가정하여 각 대안들의 결과를 다시 예측하는 방법이다.

③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은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④ 휴리스틱스(heuristics)는 엄밀한 계산이나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개괄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일반적인 발견기법들(직관적 판단, 상식,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적 발견법, 주먹구구식 판단, 발견적 학습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모형 내부의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결과의 민감성을 살피는 것은 **민감도분석**이다. 상황의존분석은 **모형 외부의 배경 변수나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정책대안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민감도분석과 상황의존분석은 가정을 바꾸어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모형 내부의 파라미터 수치를 바꾸어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민감도분석이다. 상황의존분석은 **모형 외부의 배경 변수나 환경적 요인**이 달라질 때 정책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선지는 두 분석의 초점을 뒤바꾸었다.

② O: 악조건 가중분석은 예비분석에서 우수한 대안에는 **최악의 상태**를, 나머지 대안에는 **최선의 상태**를 가정하여 결과를 다시 비교한다. 유리한 대안에 일부러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대안이 우위를 유지한다면, 불확실한 조건이 달라져도 선택의 타당성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O: 분기점 분석은 대안들의 결과가 **같아지는 경계조건**을 찾아 비교하는 방법이다. 악조건 가중분석에서 대안의 순위가 달라졌다면, 각 대안이 동일한 결과를 내는 데 필요한 가정을 확인하고 그 가정의 발생가능성을 따져 대안을 선택한다. 극단적인 최선·최악의 상태만 비교하는 데서 나아가, 어느 조건에서 우열이 바뀌며 그 조건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④ O: 휴리스틱스는 직관, 상식, 경험적 규칙, 시행착오 등을 활용하여 개괄적인 결론을 얻는 발견기법이다. 모든 가능성을 엄밀하게 계산하거나 완전한 이론적 분석을 거치기 어려울 때 **판단 과정을 간소화**하여 대안을 탐색한다. 빠르고 실용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언제나 정확한 답이나 최적의 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0.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 또는 정책흐름 모형(Policy Stream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 모형의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 또는 정책변동에 적용시킨 것이다.

②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은 일상에서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③ 세 가지 흐름이 특정한 계기를 바탕으로 결합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다.

④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는 정책의 창을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킹던의 모형에서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은 평소에 **서로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일상적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기를 통해 결합하면서 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의 기회가 형성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해결책 등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요소들이 특정한 기회에 결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킹던은 이러한 **독립적인 흐름들의 결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였다.

② X: 문제의 흐름은 사회적 상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는 과정이고, 정책의 흐름은 해결 대안이 개발·검토되는 과정이며, 정치의 흐름은 여론·선거·정권교체 등 정치적 여건의 변화이다. 세 흐름은 각각 고유한 논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평소부터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설명은 모형의 기본 가정과 맞지 않는다.

③ O: 위기사건이나 정치적 변화 등의 계기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관심, 실행 가능한 대안, 이를 수용할 정치적 여건이 결합하면 정책을 추진할 기회가 생긴다. 이처럼 **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이 가능해지는 기회**를 '정책의 창'이라고 하며, 그 기회가 지속되는 동안 세 흐름의 결합이 중요하다.

④ O: 정책선도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대안이 채택되도록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자이다.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설득과 협상을 통해 **문제·대안·정치적 여건의 연결**을 촉진하므로, 정책의 창을 열고 활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NoteBase

문 11. 신엘리트론 또는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의사결정이란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회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는 달(R. Dahl)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신엘리트론을 형성하였다.

③ 넓은 의미에서 무의사결정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④ 밀스(C. W. Mills)는 지위접근법을, 헌터(F. Hunter)는 명성적 접근법을 통해 엘리트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밀스와 헌터는 **전통적 엘리트론**의 대표 학자이다. 두 학자와 접근법의 연결 자체는 맞지만, 신엘리트론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의사결정은 지배 엘리트가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는 요구나 갈등이 **정책의제로 제기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기존 가치관이나 제도·절차를 이용해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현상 유지를 꾀한다.

② O: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달의 다원주의가 실제 의사결정에 드러난 권력 행사에 치중하여, **쟁점이 논의되기 전에 배제되는 과정**을 놓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권력 작용을 무의사결정으로 설명한 것이 신엘리트론이다.

③ O: 좁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불리한 문제의 의제화를 막는 데 초점을 둔다. 넓은 의미에서는 의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이미 결정된 정책의 집행을 지연하거나 무력화하는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변화 요구를 억제**하는 현상까지 포함한다.

④ X: 밀스의 지위접근법과 헌터의 명성적 접근법은 **전통적 엘리트론**에 해당한다. 밀스는 정치·경제·군사 조직의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권력 엘리트를 파악했고, 헌터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지목되는 인물을 조사하였다. 인물과 접근법의 연결 자체는 맞지만, 이를 신엘리트론의 설명으로 제시한 점이 부적절하다. 신엘리트론의 대표 학자는 바흐라흐와 바라츠이며, 핵심은 무의사결정이다.

NoteBase

문 1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에게 기술적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이다.

②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에게 기술적·행정적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이다.

③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와 목표 또는 목표 달성 수단에 대해 협상하는 유형이다.

④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결정자가 형식상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자는 정책결정의 권한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량적 실험가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목표의 구체화와 수단의 선택을 집행자에게 폭넓게 맡긴다**. 목표나 수단을 둘러싸고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하는 것은 **협상형**의 특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권한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 유형을 구분한다. 목표를 누가 정하며 집행자에게 어느 범위의 재량권이 주어지는지가 구별 기준이다.

① O: 고전적 기술관료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 내용을 정하고 집행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집행자는 정해진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문제에 한정된 재량권**을 행사한다.

② O: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목표와 기본 방침을 정하되 집행자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을 맡긴다. 집행자는 **기술적 권한뿐 아니라 행정적 권한**도 위임받으므로 고전적 기술관료형보다 재량의 범위가 넓다.

③ X: 추상적 목표를 제시한다는 부분은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하지만, **목표나 목표 달성 수단에 관해 협상한다**는 부분은 협상형의 특징이다. 재량적 실험가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정하기 어려워 집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집행자가 목표를 구체화하며 적절한 수단을 개발한다. 협상형에서는 결정자와 집행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 목표나 수단을 상호 조정한다.

④ O: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형식적인 결정권을 보유하더라도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따라서 집행자가 **실질적인 정책결정권과 정책 과정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재량적 실험가형에 협상형의 특징을 섞어 설명한 ③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13. 전통적 델파이(Delphi)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응답의 통계값으로 평균만 제공한다.

② 집단토론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의사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③ 익명성을 바탕으로 조사되어 통제된 환류를 수행하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 전문가 합의를 유도한다.

④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되어 다양한 예측활동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델파이 기법은 응답 결과를 **평균으로만 요약하지 않으며**, 중앙값·사분위범위 등도 제공할 수 있다. 익명성은 참여자 사이에 개별 응답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응답 결과는 **평균뿐 아니라 중앙값·사분위범위 등**으로 요약하여 의견의 중심과 흩어진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익명성은 참여자 사이에 개별 응답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확보하므로, 제공하는 통계값을 평균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② O: 대면 집단토론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의 발언에 끌리거나 다수 의견에 동조하여 자신의 판단을 바꾸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가 **익명으로 독립적인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 이러한 의사전달의 왜곡을 줄이도록 고안되었다.

③ O: 전문가에게 익명으로 설문을 실시한 뒤 조사자가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다시 제공하는 것이 **통제된 환류**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판단을 재검토하고, 설문과 환류를 반복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 합의를 형성한다.

④ O: 델파이 기법은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후 군사 분야를 넘어 기술 발전, 사회 변화, 정책 수요 등 다양한 예측활동에 활용되었다.

NoteBase

문 14. 경쟁적 가치 접근법(Competing Value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퀸과 로보그(R. E. Quinn & J. Rohrbaugh)는 조직의 효과성은 이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이익과 가치에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 접근법은 조직구조가 통제를 강조하는지 유연성을 강조하는지와 조직의 초점이 인간인지 조직 자체인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 효과성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네 가지 조직효과성 평가모형은 개방체제 모형, 합리적 목표 모형, 내부과정 모형, 인간관계 모형이다.

④ 이 접근법은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모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합리적 목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구성원의 결속과 협동, 사기 및 인적자원 개발을 중시하는 **인간관계 모형**이 적절하다. 이 단계에 '합리적 목표 모형'을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쟁적 가치 접근법은 조직효과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퀸과 로보그는 **평가자가 중시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효과성의 기준과 각 기준의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구성원의 만족을 중시하는 평가와 생산성을 중시하는 평가는 같은 조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

② O: 네 가지 모형을 나누는 두 축은 **통제·안정성 대 유연성·변화**라는 조직구조의 차원과 **내부 지향 대 외부 지향**이라는 조직초점의 차원이다. 선지의 '인간'은 조직 내부 구성원의 유지·발전에 대한 관심을, '조직 자체'는 외부 환경 속에서 조직 전체의 성장·성과에 대한 관심을 뜻한다. 이 두 축을 교차하면 네 가지 평가모형이 형성된다.

③ O: 개방체제 모형은 유연성과 외부 지향을 결합하여 적응·성장·자원 확보를 중시한다. 합리적 목표 모형은 통제와 외부 지향을 결합하여 목표 설정·생산성·효율성을 중시한다. 내부과정 모형은 통제와 내부 지향을 결합하여 정보관리·의사소통·안정성을 중시한다. 인간관계 모형은 유연성과 내부 지향을 결합하여 응집성·사기·인적자원 개발을 중시한다.

④ X: 창업 단계에서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자원을 확보하여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방체제 모형이 적절하다. 그러나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구성원의 결속과 협동, 사기 및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므로 **인간관계 모형**이 적절하다. 합리적 목표 모형은 목표 달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규칙과 절차가 정착되는 공식화·통제 단계에서 내부과정 모형과 함께 강조된다. 따라서 집단공동체 단계에 합리적 목표 모형을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15.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권화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핵심운영 중심의 구조이며,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form)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며,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이다.
㉣ 핵심운영 부문(operating core)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 지원 스태프 부문(support staff)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를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참모가 중심이 되어 신축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은 **애드호크라시**이며, 사업부 조직은 **중간관리층 중심**이다. 지원 스태프는 **기본적인 과업흐름 밖**에서 조직을 간접 지원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단순구조는 최고관리층인 전략적 정점에 권한이 집중되고, 최고관리자의 직접 감독으로 업무가 조정된다. 복잡한 계층이나 공식 절차가 적어 **집중된 권한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에 적합하다.

㉡ O: 전문적 관료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구성원이 일하는 **핵심운영 부문 중심**의 구조이다. 복잡한 업무는 전문가의 판단을 필요로 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반복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주요 조정 방식은 전문기술의 표준화이다.

㉢ X: 사업부 조직은 사업부를 책임지는 **중간관리층 중심**의 구조이다. 사업부에 운영 권한을 위임하고 본부는 산출물의 표준화와 성과 통제로 각 사업부를 조정한다. 지원 스태프 등 전문가의 협력과 상호 조정에 의존하여 신축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구조는 **애드호크라시**이다.

㉣ O: 핵심운영 부문은 조직의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련된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투입물을 확보하고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등 **조직의 본래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 X: 지원 스태프는 **기본적인 과업흐름 밖에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법률 자문, 홍보, 구내식당 등과 같이 핵심 생산·서비스 활동을 뒷받침하므로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보기는 ㉠·㉡·㉣이며, 이를 고른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습조직은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정보가 공유된다.

② 학습조직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③ 학습조직은 외부 특정 전문가를 중시하기보다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제공한다.

④ 학습조직은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학습보다는 공식적이거나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활동을 강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학습조직은 정규 교육·훈련에 치우치기보다 업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지속적 학습**을 중시한다. 동료와의 대화나 경험 공유처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도 핵심 활동이다.

선지별 해설

학습조직은 구성원의 지속적인 학습과 지식 공유를 통해 조직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과 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는 조직이다.

① O: 구성원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개인의 학습 성과가 조직 전체의 역량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보의 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② O: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이나 조직의 경험도 학습 자료가 된다. 성공 경험은 물론 시행착오와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면서 **경험을 개선에 활용하는 학습**을 높게 평가한다.

③ O: 학습의 주체를 일부 외부 전문가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한다. 구성원들이 맡은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학습 시간·자료·교류 기회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④ X: 학습조직의 핵심은 **일상 업무에서의 자발적·지속적 학습**이다. 동료 간 대화·경험 공유·공동 문제 해결처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중시하므로, 이를 공식적·정규적 교육·훈련보다 낮게 보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공식 교육·훈련도 활용할 수 있지만 학습을 그 방식에 한정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의 비공식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조직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② '젖소 사회학(cow sociology)'이라며 비판받기도 하였다.

③ 호손(Hawthorne)실험을 통해 자생적(비공식적) 집단이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④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행태과학 연구를 촉발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인간관계론은 **조직 내부의 비공식집단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조직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폐쇄체제적 이론**이므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X: 인간관계론은 구성원의 비공식적 역할에 주목하였지만, 이를 조직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한 이론은 아니다.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 비공식집단, 감정과 소속감 등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행동을 설명하였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폐쇄체제적 접근**에 해당한다.

② O: '젖소 사회학'은 젖소를 잘 보살피면 우유 생산량이 늘듯이, 근로자의 만족과 사기를 높여 더 많은 생산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인간에 대한 배려를 그 자체의 목적보다 **생산성 향상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③ O: 호손실험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업무 관계뿐 아니라 구성원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비공식집단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집단의 규범과 동료 관계**는 개인의 작업 태도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성을 임금이나 물리적 작업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O: 인간관계론은 조직을 연구할 때 구성원의 감정, 욕구, 동기와 집단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심리학·사회학 등의 지식과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조직 속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태과학**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NoteBase

문 18.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설조직의 경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권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②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집권성 정도가 높은 조직구조가 적절하다.

③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적응력은 떨어진다.

④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은 집권화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조직규모가 커지면 상층부가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위 부서에 의사결정권을 나누는 **분권화**가 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설조직은 업무처리 기준과 조정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최고관리자가 **의사결정과 지휘를 집중**하여 운영방향을 통일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려 하므로 집권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② X: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해져 상층부의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부담이 커진다. 이를 줄이고 현장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하위 부서에 권한을 위임하는 **분권적 구조**가 일반적으로 적절하다. 따라서 규모가 커질수록 집권성 정도가 높은 구조가 적절하다는 설명은 관계를 반대로 제시한 것이다.

③ O: 공식화는 구성원의 업무와 행동이 규칙·절차·직무기술서 등에 의해 정해져 있는 정도이다. 공식화가 높으면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구성원의 **재량과 새로운 대응의 여지**가 줄어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력이 떨어지기 쉽다.

④ O: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면 멀리 떨어진 부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지시를 전달하며 업무를 감독하기 쉬워진다. 상층부가 넓은 범위를 직접 조정·통제할 수 있으므로 **집권화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집권화를 쉽게 하는 조건이라는 뜻이며, 기술발전이 언제나 집권화만을 초래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9.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표준운영절차(SOP)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② 행정조직 간 종적·횡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③ 의사결정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외부의 준거집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④ 의사결정자의 자기 경험에의 지나친 의존과 선입견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표준운영절차는 반복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용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변화한 상황에서도 기존 절차를 고수하면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는 경직성이 생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표준운영절차(SOP)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미리 정해 둔 절차이다.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유용하지만, **새로운 상황에도 기존 절차를 경직되게 적용하면** 대안 탐색과 상황에 맞는 판단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O: 종적 의사소통은 상하 계층 간의 정보 전달이고, 횡적 의사소통은 같은 수준의 부서·기관 간의 정보 교환이다. 이러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가 누락·왜곡되거나 늦게 전달되고 부서 간 조정도 어려워진다. 그 결과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대안을 평가**하게 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될 수 있다.

③ O: 준거집단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태도·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의사결정자가 외부 준거집단에 강한 일체감을 느끼면 **그 집단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정보를 해석하거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집단의 관점에 치우치면 조직 전체의 목표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제약된다.

④ O: 과거 경험은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의 차이나 새로운 대안을 놓치기 쉽다. 선입견도 **기존 생각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 정보를 외면**하게 하여 대안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①이다.

NoteBase

문 20.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머슬로우(A. H. Maslow)의 5단계 욕구계층 가운데 세 번째인 '소속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growth needs)가 아닌 결핍의 욕구(deficiency needs)로 분류된다.

② 대부분의 사람은 조직 문제를 해결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중 Y이론이 지닌 인간본질에 대한 기본 가정이다.

③ 브룸(V. H. Vroom)은 조직 내 개인의 동기부여를 유의성(V: valence), 수단성(I: instrumentality)과 주관적 기대감(E: expectancy)의 함수관계로 설명하는 기대이론을 정립하였다.

④ 샤인(E. Schein)은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지닌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자는 일종의 진단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브룸의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이다. 유의성·수단성·기대감을 바탕으로 개인이 행동을 선택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내용이론은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욕구와 인간의 특성에, 과정이론은 사람이 기대와 판단을 거쳐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① O: 머슬로우의 '소속의 욕구'는 다른 사람과 애정·친교를 나누고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려는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다음인 제3단계이며, 충족되지 않은 부족을 메우려는 **결핍의 욕구**에 속한다. 잠재력을 실현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성장의 욕구와 구별된다.

② O: 맥그리거의 Y이론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창의력과 상상력이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에게 널리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고 외부의 통제와 지시를 강조하는 X이론과 구별된다.

③ X: 브룸의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이다. 유의성은 보상이나 결과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수단성은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기대감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기대이론은 이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행동의 선택과 노력의 정도를 설명한다. 선지의 기대이론 설명 자체는 맞지만, 발문이 묻는 내용이론의 설명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O: 샤인의 복잡인 모형은 인간의 욕구와 잠재력이 다양하고, 동기도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관리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관리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구성원의 욕구·능력과 상황을 진단**하여 적합한 관리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리자의 진단자 역할을 강조한다.

NoteBase

문 2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와 행정은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불편부당한 직무 활동을 통하여 공익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실적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

④ 지나친 정치적 중립의 강조는 공무원집단을 오히려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불편부당한 직무 수행으로 공익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거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원칙이다. 완화론은 이러한 공정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관계 및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중립의 요구를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① O: 행정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형성과 조정에도 관여한다. 이처럼 **정치와 행정을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은 양자의 협력을 인정하고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거가 된다.

② X: 불편부당은 특정 정당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일해야 공익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이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거**이므로, 정치적 중립의 완화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분류할 수 없다.

③ O: 전통적인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완화론은 민주주의와 실적주의가 정착하면 그와 같은 광범위한 제한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단순한 정치활동 억제를 넘어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율성도 고려**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한다.

④ O: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무원을 정치·사회적 논의에서 단절시키면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접하고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 결과 공무원집단이 내부의 관점과 이해에 머무르는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치적 중립의 완화를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22. 탄력근무제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② 업무시간에 대한 자율성 부여로 근로의욕 고취

③ 기관간·부서간 업무 연계 향상

④ 통근 혼잡 회피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지만,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기관·부서 간 업무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업무 연계 향상을 제도 자체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지별 해설

탄력근무제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각 등 근무시간의 배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이다.

① O: 개인 사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일과 가정생활 등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은 업무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② O: 업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은 자신의 생활과 업무를 스스로 조절한다는 인식을 높인다. 이는 직무만족과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하여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다.

③ X: 직원이나 부서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연락·회의·공동업무에 필요한 시간이 맞지 않아 **업무 협조와 연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공동근무 시간대를 확보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관 간·부서 간 업무 연계 향상을 탄력근무제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볼 수 없다.

④ O: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 통근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면 **교통 혼잡과 시간 낭비**가 줄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NoteBase

문 23.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적주의가 공직제도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민주적 대응성이 강화되었다.

②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Act)을 통해 공무원 임용에 있어 공개시험제를 확립하였다.

③ 실적주의의 개념은 1900년대 초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어적·소극적 인사관리 개념으로 바뀌었다.

④ 실적주의의 내용은 펜들턴법 제정 이후 변화가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미국의 1883년 펜들턴법은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연고 대신 **공개경쟁시험으로 확인한 능력**을 공무원 선발의 기준으로 삼아 실적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지별 해설

실적주의는 정치적 충성이나 개인적 연고가 아니라 능력과 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고 관리하는 원리이다.

① X: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전문성·안정성을 높인다. 그러나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약해지고 인사제도가 경직되면 국민의 요구에 대한 **민주적 대응성이 저하될 수 있다**. 공개경쟁을 통한 공직 진출의 기회균등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응성은 구별된다.

② O: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으로 연방공무원 선발에 **공개경쟁시험**을 도입하여 직무수행 능력에 따른 임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선거 공로나 정당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공직을 배분하던 엽관주의의 폐해를 줄이려는 개혁이었다.

③ X: 초기 실적주의는 정치적 간섭이나 정실에 따른 임용·해고를 막는 방어적·소극적 성격이 강했다. 1900년대 초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는 직무를 분석하고 적격자를 배치하며 교육훈련·승진·보수 등을 합리화하는 **적극적 인사관리**로 발전하였다. 선지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거꾸로 설명하였다.

④ X: 실적주의의 내용은 펜들턴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 확대·변화하였다**. 채용과 해고 과정의 정치적 남용을 막는 데서 출발하여 인사관리 전반의 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이후에는 공직의 대표성과 차별 방지에 대한 요구도 반영되었다.

NoteBase

문 2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채용 과정에서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소외집단 출신을 공직에 채용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에서 할당제를 강요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관료 입직 이후의 재사회화는 대표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을 높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직에 들어온 뒤 조직의 가치와 규범에 동화되면 출신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성향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재사회화는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기보다 **실질적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 공직의 인적 구성에도 반영되도록 관료를 충원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이 공직에 참여하도록 하여 **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려 한다.

② O: 종래 공직 진출 기회가 부족했던 소외집단의 참여를 확대하면 고용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그 집단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처럼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O: 집단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할당제를 경직되게 적용하면,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는 지원자가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도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대표성 확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역차별의 우려**이다.

④ X: 입직 이후의 재사회화는 관료가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관료가 출신집단의 가치보다 조직의 이해와 관행을 우선하게 되면 **출신집단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정도가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재사회화는 민주적 대표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적 구성상의 소극적 대표성이 정책 활동에서의 적극적 대표성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된다.

NoteBase

문 25.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급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지어 준다.
㉡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보다는 전문행정가의 원리를 강조한다.
㉢ 테일러식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다.
㉣ 계급제는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계급제에서는 **사람의 자격·능력에 따라 정한 계급**을 기준으로 맡을 일을 결정한다. 동일 계급에 해당하는 여러 보직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높다.

보기별 해설

㉠ O: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능력 등을 기준으로 계급을 정하고, 그 계급에 맞는 직무를 맡기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의 계급이 업무 배치의 기준**이 되어 맡을 수 있는 일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한다.

㉡ X: 계급제는 다양한 업무 경험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어 여러 분야를 조정하는 **일반행정가**의 양성을 중시한다. 특정 직무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전문행정가의 원리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 X: 테일러식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분석하고 그 종류·곤란성·책임 등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사람의 자격·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제와 구별된다.

㉣ O: 계급제에서는 공무원을 특정 직무에 고정시키지 않고 해당 계급에 맞는 여러 보직에 배치할 수 있다. 직무를 세분하여 관리하는 직위분류제보다 **보직 이동과 인력 재배치가 수월**하므로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계급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과 ㉣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26.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는 평정자가 중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연쇄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③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평가시점에 가까운 실적을 평정에 더 많이 반영하여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④ 선입견은 평정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개인적 특성(출신학교, 종교 등)에 대한 편향성을 평정에 반영하여 오류를 유발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별로 정해진 척도에 점수나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연쇄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은 아니며**, 한 요소에서 받은 인상이 다른 요소의 평가에 번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연쇄효과'는 한 평정요소에서 받은 좋은 인상이 다른 요소의 평가에도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업무처리 능력을 높게 평가한 나머지 협조성도 실제 근거 없이 높게 평가한다면, **서로 다른 요소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② X: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업무의 양·질 등 평정요소마다 미리 정한 척도에 점수나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요소별 척도를 두더라도 평정자의 주관적 인상이 개입할 수 있으므로 **연쇄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은 아니다**. 한 요소의 높은 평가가 다른 요소의 점수까지 끌어올리는 연쇄효과가 이 방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③ O: '근접효과'는 전체 평정기간의 실적을 고르게 살피지 않고 **평가시점에 가까운 최근 실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오류**이다. 초반의 성과보다 평가 직전의 성과나 실수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④ O: '선입견'에 의한 오류는 평정대상자의 출신학교·종교 등 개인적 특성에 대한 평정자의 기존 편향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실제 업무수행과 무관한 특성에 대한 편향** 때문에 같은 성과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 평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NoteBase

문 27. 직무급(Job-based Pay)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적용

② 배치전환, 노동의 자유 이동 등의 인사관리상 융통성 강화

③ 직무를 중시하여 개인별 보수 차등에 대한 불만 해소

④ 능력 위주의 인사 풍토 조성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직무급은 **담당 직무의 가치**에 보수가 연결되므로, 다른 직무로 이동할 때 보수와 요구 자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배치전환이나 노동 이동에서 **인사관리의 융통성이 제약**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직무급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파악한 직무의 난이도·책임·중요도 등 상대적 가치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제도이다.

① O: 보수의 기준이 담당자의 나이·근속연수가 아니라 직무의 가치이므로, 같은 직무에는 같은 보수를 적용한다. 이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② X: 직무별로 보수와 요구 자격이 정해지므로 다른 직무로 옮길 때 보수 조정과 자격 충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배치전환이나 직무 간 이동이 어려워져 **인사관리의 융통성이 제약**될 수 있다. 융통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직무급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O: 개인적 배경이나 자의적 판단 대신 직무의 상대적 가치라는 공통 기준으로 보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불합리한 보수 차등**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사람의 보수를 같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근속연수만으로 높은 보수를 받기보다 가치가 높은 직무를 맡아야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려는 동기를 높인다. 이런 점에서 연공보다 **직무수행능력을 중시하는 인사 풍토**의 조성에 기여한다. 다만 직무급의 직접적인 보수 기준은 개인이 보유한 능력 자체가 아니라 맡은 직무의 가치이다.

NoteBase

문 28. 재정준칙(Fiscal Ru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준칙의 유형에는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이 있다.

②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③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포함한 국가의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정책을 의미한다.

④ 미국의 페이고(PAYGO: pay-as-you-go)제도는 의무지출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 입법 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다른 의무지출 감소 등과 같은 재원조달방안을 동시에 입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정준칙은 행정부의 재정운용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출·적자·채무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여 재정규율과 재정건전성을 높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정준칙은 규율하는 재정지표에 따라 구분된다. 채무준칙은 국가채무 규모나 비율에, 재정수지준칙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재정수지에 한도를 둔다. 지출준칙은 지출 수준이나 증가율을 제한하고, 수입준칙은 수입의 상한·하한이나 초과세입의 사용 방식 등을 정한다.

② X: 재정준칙은 미리 정한 수치적 기준을 따르게 하여 행정부의 **재정운용 재량권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지출과 적자·채무의 누적을 억제하고 재정규율과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므로,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③ O: 재정준칙은 재정수지·국가채무·재정지출·재정수입 등 **총량적 재정지표의 구체적인 목표나 한도**를 법률 등으로 명문화하여 재정운용을 규율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건전재정을 지향한다는 선언을 넘어 수치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④ O: 페이고(PAYGO)는 신규 입법으로 의무지출을 늘리는 경우 그만큼 세입을 늘리거나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는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입법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새로운 재정 부담을 **세입 증가나 지출 감소로 상쇄**하여 재정적자의 확대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NoteBase

문 29.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혜택을 준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② 조세지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보조금이라고도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재정법」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3번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으로 줄어든 세수를 **예산지출과 같은 재정지원으로 파악하여 그 규모와 내역을 예산 형식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②

조세지출은 세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므로, **세제혜택만큼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간접지원**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숨은 보조금'이라고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2026.2.10>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NoteBase

문 30. 우리나라의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제49조는 예산성과금의 기본조항이다.

②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급대상은 개인에 한정되며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①

국가재정법 제49조는 예산성과금의 지급 근거와 심사 절차 등을 정하는 기본조항이다.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 그 기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NoteBase

④

조직 구성원의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늘린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2, 2017.1.6, 2022.7.11>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NoteBase

문 31.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본예산은 정부 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이원화한다는 점에서 복식예산(double budget)이라고 한다.

②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지출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심의를 돕는다.

③ 자본예산제도는 인플레이션기에 적정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움을 준다.

④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지출의 혜택을 누릴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국채 발행으로 자본지출을 확대하면 총수요가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수 있다**. 자본예산제도는 경기침체기의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기에 적정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본예산제도는 일상적인 행정 운영에 쓰이는 경상지출과 장기간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자산에 대한 자본지출을 **별도의 예산으로 구분**한다. 정부 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하므로 복식예산이라고 한다.

② O: 자본지출을 경상지출과 구분하면 투자사업의 필요성, 장기적인 비용과 편익, 재원조달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지출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분석과 심의**에 도움이 된다.

③ X: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지출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투자지출을 확대하기 쉽다. 이는 경기침체기에 총수요를 늘려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기에는 **총수요를 더 늘려 물가상승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기에 적정한 예산제도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④ O: 도로·시설 등 자본지출로 형성된 자산의 편익은 미래세대에도 돌아간다. 국채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미래세대도 조세 등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므로, **편익을 누리는 세대와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를 대응**시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③이다.

NoteBase

문 32. 예산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 통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②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비비, 준예산

③ 예산 공개의 원칙 - 국가정보원 예산

④ 예산 총계주의 원칙 - 전대차관

정답 1번

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예산을 추가·변경하는 제도로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통일성 원칙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직접 연계를 금지**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에 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만, **실제 지출은 차기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국회의 예산 의결 전에도 헌법·법률로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그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법 제16조(예산회계)
⑦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④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관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이다.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NoteBase

문 33.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환경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의 변화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③ 예산 결정을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경제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④ 정치적 다원주의와 사회의 안정성을 전제로 한 예산이론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점증주의는 예산 결정을 이해관계자 간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으로 본다. 이를 정치적 과정보다 경제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설명은 점증주의의 관점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점증주의는 환경과 정책 효과를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인간의 정보 수집·분석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비교하여 최적의 예산을 정하기보다 **기존 예산에서 소폭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한다.

② O: 전년도 예산에는 이미 이루어진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므로 이를 다음 예산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산 전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보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소폭의 증감**에 관심을 둔다.

③ X: 점증주의는 예산 결정을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최적 자원배분 과정으로 설명하기보다 **참여자 간 협상·타협·상호 조정의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석하는 관점은 합리주의 예산이론에 가깝다.

④ O: 다양한 이해집단이 각자의 요구를 제시하고 상호 조정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전제로 한다. 또한 기존의 가치·제도·예산 배분에 관한 합의가 비교적 유지되는 **안정된 사회**에서 점진적 조정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예산 결정을 경제적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한 ③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NoteBase

문 34.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률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도화되었다.

②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 하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①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먼저 제정·시행된 뒤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이 1996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②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외국인 중에서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둔 거주자, 학술·연구 목적의 일시 체류자, 국내 사무소가 있는 법인·단체**가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NoteBase

④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인 국가기관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oteBase

문 35.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된다.

③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재산등록 대상인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상 공직유관단체는 **직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된다. 다만 청소원·건물 관리원·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원은 제외**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2023.12.26, 2026.8.4>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NoteBase

③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상 등록의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에 관하여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2023.6.13, 2023.7.18>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및 전세권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1.4.1>

④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 심사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 · 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NoteBase

문 36.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③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지 않는다.

④ 정당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의원 임기 중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②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지만,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없다**. 지방의회의원이 체포·구금되면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원칙적으로 선거구별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그 정수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20.1.14>

NoteBase

문 37.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왈도(D. Waldo)는 공공윤리를 자신과 가족보다는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② 소극적 의미의 행정윤리는 부정부패, 직권남용, 무사안일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④ 현대 행정이 전문화, 과학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정답 4번

①

왈도의 공공윤리에서는 **행위의 이익이 자신·가족을 넘어 대중에게 향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자신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공윤리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더 넓은 대중의 이익에 기여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②

소극적 행정윤리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금지·회피하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다.
부정부패·직권남용·무사안일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③

취업심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2025.8.14>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 ·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NoteBase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 ·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다. 건축 · 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

④

행정이 전문화·과학화될수록 공무원의 재량권과 정책결정의 영향력이 커지므로 **행정윤리의 중요성은 증대한다**.

NoteBase

문 38.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①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도 **19세 이상이고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NoteBase

③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 요건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 19세 이상**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NoteBase

문 3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4차 산업혁명을 지식·정보혁명이라고 한다.

②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핵심 기술로 한다.

③ 4차 산업혁명의 사회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설명된다.

④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모형으로 FAST(Flatter, Agile, Streamlined, Tech-savvy) 정부를 제시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식·정보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가리킨다. 4차 산업혁명은 그 기반 위에서 기술의 융합과 **초연결·초지능화**가 심화되는 변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식·정보혁명'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화와 생산 자동화가 진전된 **3차 산업혁명**을 가리킨다. 4차 산업혁명은 이를 토대로 여러 기술이 융합하면서 사람·사물·시스템의 연결과 지능화가 심화되는 변화이다.

② O: 사물인터넷은 사물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고, 빅데이터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을 통해 판단·예측을 수행한다. 이 기술들이 결합하여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구현하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

③ O: 'VUCA'는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을 뜻한다. 변화의 속도와 폭이 크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여러 요인이 얽혀 있고, 상황의 의미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환경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④ O: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FAST 정부'는 수평적인 조직과 협력(Flatter),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Agile), 조직·업무의 간소화(Streamlined),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Tech-savvy)을 강조한다. 이는 **수평적·민첩한 조직과 기술 활용**을 통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는 정부모형이다.

NoteBase

문 40. 우리나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 · 도에 2개의 시 · 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 · 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며, **위원장과 위원 1명은 상임, 나머지 5명은 비상임**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원칙적으로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보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NoteBase

④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다수의 시·도에 동일한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 명령)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 · 명령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 · 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NoteBase